**토론 스크립트**

정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병국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남남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우선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이 민경인씨고요. 현재 NGO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30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김효은씨고 20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윤지민씨이고 30대 초반이면서 대학원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20대 초반이시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이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이시고요. 제 옆에 함께하고 계신 분은 천해성 전 차관님이시고 우리 연구원에서 함께 책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은 과연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정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적대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적대와 대결의 상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경인씨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민경인:

네, 저는 이제 30대를 거의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정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기가 거의 60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술대회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는 사실 이웃국가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프레임에 쌓여 있는 건 아닌가, 적대 아니면 뭔가 화합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 문제가 되게 힘든데 너무 크고 광범위한 문제를 약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실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웃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네, UN에도 함께 동시에 가입된 그 주권국가로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윤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지민:  
저는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웃국가라는 개념 앞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명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이웃국가 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관계라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북한이란 나라가 그냥 타국으로 생각을 이미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벌써 정전이 되고 나서 76년이란 세월을 저희가 분단이 되어서 살아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매스컴에서 젊은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들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상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도발 혹은 비난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젊은이들이 그것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른 국가, 즉 외교관계를 철저하게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다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서로 더욱더 협력을 해야 된다, 라는 조금 특별한 이웃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김효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은:  
저는 앞의 두 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근처에 있는 나라, 이웃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가 태어났을 때, 제가 90년대생인데 그 때 정도면 그 때 태어난 친구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은 정도로만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중에 역사책에서 보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지, 사실 전쟁에 대한 무서움이나 두려움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국지적인 도발전은 있었지만, 평상시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느껴왔거든요. 그냥 옆에 약간 시끄러운 나라 정도로 저는 느끼고 살고 있는데 이게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지만 협력도 해야 될 대상이지만 강제로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좋기 때문에 관계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정병국 의원:예, 우리 유진성 씨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분과) 10년(의 나이) 차이가 나죠.

유진성:  
네, 스무살이니까요. 저도 앞에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웃 국가이고 북한이라는 국가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과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양보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입장 표명해야 할 때에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6.15나 10.4 선언 때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북한은 제1, 2차 연평해전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자행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 분의 생각들이 북한을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우리의 국토이고 통일해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국가, 이웃국가로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인데 통일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에서 합의통일 등의 이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유진성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성:  
저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국가를 평생 등지고 살 수도 없는 처지이고 대한민국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해가면서 통일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현 세대에서 통일하기 위해 급하게 시도하지 않고, 설령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차곡차곡 천천히 준비해가면서 그렇게 통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우리 김효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은:  
사실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 단체에 있었었거든요.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 한 나라로의 통합이라고 배워왔을텐데 사실 통일을 그러한 어떤 하나의 상태로 목표의 상태로 정의하는 게 아닌, 그 과정으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통일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결과물로서의 통일이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 한 민족이었다가 종교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분리된 나라들도 많잖아요. 옆에 국경만 맞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념으로 갈라져서 이미 몇 십년 동안 살아왔는데 서로의 비용들을 치뤄가면서까지 현상태의 생활방식을 바꿔가면서까지 통일을 굳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최대한 서로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냥 통일을 하나의 같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병국 의원: 그러면 민경인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일이라는 어떠한 프레임 혹은 틀 자체가 약간 예전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평화라는 그 프로세스 안의 통일이 과정에 있다는 정도로 다가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청년들과 같이 평화학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현실의 문제인데 현실에서 해소되지 않는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어떤 갈등을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의 문제 같지는 않고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느낌인데 그것보다는 통일이 됐을 때 즐거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뭔가 통일 이전의 평화라는 어떠한 감성이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 통일은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윤지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지민:  
저는 일단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합쳐져서 평화를 위해 합쳐진다, 이제 이런 순진한 접근보다는 사실 지금은 제가 첫번째로 떠오른 질문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며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관계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안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어쩌면 발전의 기회가 열려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개념에서 청년들이 다가간다면 통일을 되게 합리적인 방식의 안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적과도 결국에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을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 이긴다는 것보다도, 사실 소프트파워 같은 일에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적을 우리 편으로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흥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는 필수이고, 그 안에서 협력도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포커스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병국: 통일평화연구원의 임주혜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더 이상 통일이 당위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 젊은 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대북 정책에 관해서 더 이상 통일을 빨리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을 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남북관계를 발전해내는 것이 결국에 단계를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천해성 차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천해성 차관:  
젊은 세대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기존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통일의 문제, 통일방안, 통일에 대한 접근 이런 것도 물론 그 나름의 중요성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향해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러는 그 과정에서 평화롭게 일단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등 길게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육이든지 아니면 통일정책을 계속 이렇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저도 역시 사실은 오늘 모신 네 분들 중 두 분은 나름 그래도 좀 보수적이다, 다른 두 분은 나름 진보적이다 하는 이런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 세대 간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각과 사고의 틀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갖게 하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북한은 국가, 이웃국가 그리고 또 그렇게들 보시고 있고 또 통일에 꼭 필수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대상만은 아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절차를 밟고 갈 수 있지만 무조건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과거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북한이 핵을 거의 보유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때로는 적대적 관계에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웃국가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제는 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핵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민경인씨부터 말씀을 주실까요?

민경인: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점과 비슷한데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있거나 하고 우리도 원자력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저건 위험이야'라고 하는 게 약간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럼 북한은 비합리적인 행위자인가? 애인가?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시스템으로 이미 안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데 그게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고 거기서 핵을 쏘면 저희도 다 배운 것처럼 6개국 주변국이 다 동원되고 미국이 바로 동원되는데 그건 핵을 쓸까?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북한이 왜 핵을 가지고 있지?라고 했을 떄 실리적으로 그 핵이 없으면 사실 이라크처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냥 악의 축으로 인정되는 순간 폭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과연 이 핵을 전쟁무기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무언가로 사용은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는 사용되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윤지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지민: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핵폭탄이라는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핵폭탄을 가진 국가가 옆에 있는 이웃 국가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적습니다.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위협 속에서 그 북한이 합리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아까도 대화의 통로을 열고 그리고 궁극적인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은 필수적이다, 나중에라도 그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북한이 놓을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놓을 수 없는 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사실 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위협을 잘 느끼지 못한다 라고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차 핵실험이 일어났고 제가 GP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봤고 여러 가지 편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한국의 모습이나 실제 들어와서 보는 모습이랑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랑 너무 다르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이라는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주 용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되게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쟤네는 저럴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수 있는 데에 방해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결국에는 서로가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문제에서 하나의 둘이 통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핵을 보유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대적인 국가가 우리하고 접해 있는데 그 바로 가깝게 사는 우리 내부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위험부담이라든가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하고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지민:   
이제 아무래도 자꾸 옆에서 똑같은 위협을 계속 느끼면 그것에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70년 동안 지금 그것을 적응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앞에서는 평화가 되는 것 같아서 "어?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1년 뒤에 갑작스럽게 급진적으로 변해버리고 "역시 안 되겠다" 하니까 또다시 평화적으로 되고 이런 반복적인 것 속에서 젊은층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시시때때마다 규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정의하는 북한에 대한 그 모습을 아예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주 특이하게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연평도에 포격이 떨어졌을 때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유학생들을 다 집합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체감이 됐고 군 생활을 하면서 "어, 이건 진짜 위험이 있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느꼈고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진 친구들이나 시민권을 가진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친구들만 문자를 따로 받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느끼는 거랑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병국 의원: 김효은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은: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국내에서 느끼는 것이랑 해외에서 것이 왜 다른지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에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되는 핵도발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익숙해지기도 하잖아요?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가지 제가 생각하는 점은, 왜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것만으로 이것이 왜 덜 위협적이라고 느낄까, 과연 그게 익숙함만이 원인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그 핵을 사용했을 때 그들 자체로도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도발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북한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조건이 제 마음에 안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실 일반 시민인 제 입장에서는 답보상태이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라고 말하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보기에 "너네는 가지고 있는데 왜 난 안 돼?"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고 그것은 설득의 방향성이 아닐 수 있다,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저에게는 대안을 아직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병국: 유진성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진성:  
앞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미 국제사회를 가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봤을 때 일례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때 서방 국가들이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잖습니까?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했을 때 서방 국가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예시를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들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핵을 들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핵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정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적으로 핵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국제사회 등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당연히 평화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무력을 무조건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극단적인 상황에 있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수단과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그러면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웃하고 있는 중국,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외교의 기본 축을한미동맹을 전제로 해서 해왔는데 그러한 가장 가깝게 이웃한 나라이고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 또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기본축으로 생각하는 미국 간의 아주 극렬한 갈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결국은 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기적 상황이라든가 안보적 상황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이번에는 우리 윤지민씨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윤지민:  
지금 국내에서는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미국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갈 거냐.지금 젊은 중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누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친중이다, 친미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이슈니까 아젠다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도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선택을 해서 올바른 선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느 쪽을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느 부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곧 외교일텐데 그 외교적인 측면으로 "한 쪽에 붙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 때, 경제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계속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이번 정권은 중국 혹은 미국과 친하다는 발상이 저는 굉장히 옛날 방식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바뀌게 힘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쪽에 맞추자가 아니라 양쪽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됐으면 합니다.

정병국 의원: 김효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미국과 중국, 어느 한 나라를 중점적으로 타겟팅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기보다 이슈별로 미국이 필요할 때는 미국과 대화할 수도 있고 중국이 필요할 때에는 중국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 질문을 주신 것 자체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를 택하라고 미국이나 중국이 요구했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느냐,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질문이 유효한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조차도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에 더 이익인 쪽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미중 사이에서의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것은 대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인터넷 등을 보아도 젋은이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항상 외교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외교를 논할 시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외교를 하는거야?"이렇게 결국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좋으라고 (외교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국가들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극명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정병국 의원: 유진성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진성:  
저도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지만 미국이나 중국, A와 B라는 특정국가 중에서 한 쪽에 서라는 문제는 답하기 매우 힘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외교적 상황 속에서 중국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미국과 붙어 있다가 중국으로 갑자기 넘어와 외교적 실익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180도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익 위주로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민경인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민경인: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미 이것은 시스템이 됐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에서는 이벤트랑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상수와 변수가 있다면, 사실 상수는 이미 중국은 스스로 베이징 컨센서스 혹은 미국 워싱턴 컨센서스 등으로 다 상수화가 되어 있고 변수가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평화 프로세스가 상수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못할텐데 계속 움직이니까 요구를 잘하면 한국이 여기저기 붙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리외교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 패턴을 좀 이해한다면,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계속 보면 사실 변하지만 기존에는 안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패턴으로 보고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평화 프로세스로 이제 저는 사실 약간 마치 역사 교육이나 통일 교육을 못받았거나 하는데 저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통일교육 단체에도 있었는데 이전 방식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나 아니면 그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계속 대세가 됐는데 그럼 미국도 중국도 심지어 북한도 사실 그 안에 주민들과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점점 늘어난다면 한국에 있는 시민들, 청년들이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통일해야해'라고 하는 당위가 아니고 오히려 안고 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했습니다.

정병국: 이 시점에서 천해성 차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천해성 차관:  
지금 요즘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이슈와 같은 어느 자리에서나 빠지지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에서의 외교의 중심은 당연히 우리의 국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에 있고 그러면서 중국의 최근의 부상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또 중국과의 관계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최근의 여러 논의나 흐름들은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택의 문제로 많이 전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논의를 할 때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임주혜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임주혜:   
평소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존에 그런 안미경중의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외교 방식은 이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너무 중요하고 중국도 저희에게는 너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둘 사이에서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과 같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여 국익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은 무엇인가, 또 저희끼리 합의를 이루어 그 이득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외교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는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좀 더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부분 중의 하나로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과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윤지민: 전문 분야 등 예시를 주시면?

정병국 의원:  
지금 현재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미국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동맹의 전제 위에서 동맹의 선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만약 그렇게 하면 보복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지민: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현재 현재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도와준 국가의 반대편에 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위급상황이 왔을 때 과연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밀어줄 수 있는가 라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든 네 분이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당장은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게 더 국익에 우선한다 하면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가 있는데도 이 때는 이쪽에 섰다가 저 때는 저쪽에 섰다 라고 하면 이쪽저쪽 다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경인:  
제가 보기에 이 관점은 사실, 현실주의 관점이잖아요. 국가가 단일행위자일 경우 그렇게 되지만, 미국도 뭔가 공격을 한다 아니면 한미동맹을 한다 했을 때 결국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상원과 하원 다 거쳐야 되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고, 한국도 사실 지금 정책을 만드는 방식이나 기조가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상황이 이러니 잘 모르니까 너네는 좀 빠져있고, 큰 것은 우리가 할 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서히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냥 전쟁 저널리즘에 의해서 '뭔가 선택해야 되나?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할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 얘기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일행위자니까 '우리 대통령이 결정했어.' 라고 하는 순간 '그럼 너 다음에 우리가 안 도와줄거야. (북한이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분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화국을 지키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마키아벨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리외교든 아니면 비핵화 3000 등을 한다는 게 한 축이라면 오히려 앞으로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세계적으로 더 흐름에 맞지 않은가, 중국, 미국, 북한 시민들, 주민들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우리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인권문제와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인도적 협력은 남북간의 정치나 군사적 사안과 분리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와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서도 그렇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조금씩 다루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첨예하게 정치권에서는 대립된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도적 협력 문제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번에는 김효은씨부터 먼저 하실래요?

김효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UN이나 국제기구 혹은 저희가 보낸 식량 지원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병국 의원: 의약품이라든지 일반적인, 즉 국제사회에서 논하는 인도적 협력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김효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말 그대로 인간의 생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우선 인도적 협력을 계속해서 그와 같은 혁명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을 제기를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사실 북한 내부적으로 정말로 큰 타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정병국 의원: 인도적 협력은, 남북간의 정치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해야한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도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울러, 지속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립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효은씨 부터 먼저 하실래요?

김효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un이나 국제기구 식량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병국 의원:: 의약품이라던지, 일반적인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김효은: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가치가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인도적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게 맞는지에 관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그들에게 타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큰 타격보다는 너네 이렇게 얘기하는거 인권 침해야,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너네 계속 인권 침해 할거야? 이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 협력이라는 한다는 것이 기존에는 읭약품이나 식량품 지원 위주였는데, 교류를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을 늘려 나가는 것도 일종의 인도적 협력의 새로운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변수가 많아지면, 다루기 힘들어지기 대문에, 북한입장에서도 교류가 늘어나면 바깥의 정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교류를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의 혹은 경제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존의 인도적 해결로 되지 않는, 문제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유진성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 언젠가는 되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자체가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고, 그 예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결핵치유제 지원해준 적이 있으나, 치유제 사용에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각합니다. 인권문제도 비슷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BBC나 언론사를 보면 인권 실체 영상이 수십개가 있고, 우리도 북한 인권 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급을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민경인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인: 주변에 북한 청년이 같이 사는데요, 되게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한국 살이가 힘들다고 할 때, 수강신청도 할 때 도와주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 추석에 20만원 선물울 사서 저희 집에 온거에요. 제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너무 고마웠다고 돈을 다 털어서 사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게 개인의 관계가 더 발전하면, 사회 국가의 관계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저에게 들더라구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보면 북한인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랑 같은 사람인데, 나는 좀 더 운이 좋게, 캐나다 이런 곳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왜 나는 먹고 자고 외롭지 않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운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적용을 한다면, 단순히 물자를 주고 말고가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 답게 살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지? …?

우리가 유럽 같은 좋은 나라들을 보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 오면 행복하겠다 라고 느낌을 들어야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 들어보면 한국에 사는게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인간으로서 바라본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친구, 동료, 이웃국가로서 해야 하고. 저는 난민 쪽 관련된 일도 했는데, 멀리 있는 남수단도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북한은 이념에 따라 주고 안주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민경인씨가 기아대책을 다루고 있는 NGO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 식량난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일반적인 국가들을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면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NGO단체에서 활동하실 때 민경인씨가 느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민경인: 저는 사실 더 도와주고 싶다는 친근감이 들긴 하지만, 한국 국적은 못가니까 다른 국적분들이 가시는데, 거기서도 처음에는 빵공장을 하거나 쌀을 지원해주고 했지만 이것은 너무 한시적이었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구축,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거에요. 너네 우리한테 주고 우리를 거지를 보지? 이게 아니고, 뭔가 우리랑 하고 싶어하네 이런 느낌?

정병국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경인씨는 한국사람임을 전제로 하지말고 국제기구 관점에서 북한을 지원할 때하고 다른 아프리카 여타 국가들 지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민경인: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윤지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지민: 저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 든건데, 과연 국가가 인류애를 가지고 국제무대를 통해서 타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류애를 가지고 타국가를 도와준 케이스가 괜찮이 많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상대방, 지원을 받는 국가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위협을 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인류애를 목적으로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애보다도.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인류애를 목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전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타국가를 도와줬는데,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게 나오는 행동 리액션은 완전히 다른거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얘네는 이건 안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인류애를 가지고만은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데리고 오기위한 전략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국익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라는, 명목상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그게, 주가 된다고 보이는 순간 그 내부의 국민 정서는 좋을 수가 없죠.

정병국 의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세계적 어느 나라에서 인권 침해하는 행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저항을 하는데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게 요즘 미얀마 사태같은거죠. 과거에 우리가 군사독재 하에서 항거를 할 때에도 외국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북한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들이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효은씨와 같이 그것을 인권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과연 나아질까, 바뀔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북한의 독특한 체제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고의 이웃국가이지만 특수한 관계 때문에 다른 나라를 대할 때 하고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은: 저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이고, 이웃국가, 분단국가여서라기 보다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해주시면서 생각이 나서 묻고 싶었던 부분이 인도적 협력이나 인류애로 포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나아가서 생각을 했던 것이, 과연 북한 내부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해질수록 그 내부안에서도 체제는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안정한 체제가 되면 분명히 그들도 어떤 희생양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외부적인, 국제사회의 도발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인데, 그 타깃은 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라도 인도적 협력을 지속을 하면은 …

정병국 의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통일부 폐지에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성씨 먼저 하실래요?

유진성: 저는 통일부 폐지해야한다 라는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하는 역할 자체가 탑 부서들이 맡을 수 없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 통일부와 같이 폐지하자고 나온 것이 여성가족부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랑 어느정도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부에 비해서. 통일 교육이나 북한 이탈주민 재교육과 같은 역할은 현재 대한민국의 다른 대체할 만한 부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통일부라는 것 차체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라는 의견에 저는 어느정도 동의하기에, 통일부 폐기는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민경인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경인: 저는 약간 이것을 틀어서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일하다 고민이 많이 드는 것이여러분도 생각해보시면, 열정없는 리리더 일하는 것, 역할 없는 리더랑 일하는 것 그리고 비전없는 리더랑 일하는 것? 이 세가지 중에 어떤게 제일 힘들까하는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 통일부 폐지가 이거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부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통틀어서 통일부를 없애자 라고 하니까 여기서 양극화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통일부가 차라리 평화부나 이런걸로 아예 개념을 더 크게 잡아서 말씀하신 것도 있으면서, 오늘 얘기했던 평화프로세스까지 다룰 수 있는 한국 내부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거면 좋겠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은 반대구요, 오히려 다른 역할, 새로운 비전, 더 열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서 주는 채찍 같은 거고, 근데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에 말리니까 연달아 나오는게 여성가족부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윤지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지민: 저도 통일부를 지금 폐지하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과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부가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금 쓰는데, 세금 소비를 엄청 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 질문에 답한 것과 동일하게 다른 국가지만 특별한 존재.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도입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북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논의를 해야하는 시기가 올 때, 저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일들은 다른데서 대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되어야 해야 할 일들이 다른 단체,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 중에서 이미 행정부처나 관할구역을 나누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있더라구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쳐봤는데,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국군 장병분들 중에서 포로가 되셨다가 거기서 강제노역을 하시다가 탈출하셔서 한국으로 돌아 오셨는데, 법정으로 소송으로 걸었어요 국가 대 국가로. 왜냐하면 포로를 인도적인 차원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급에 대해서 북한에게 달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관계가.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컨텐츠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저작권료를 주는 것 중에서 떼서 줘라라고 법적으로 나왔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통일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일부가 북한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단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군장병, 그런 분이나 북한과의 문제가 분한테,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마치 통일부는 북한을 대변하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줘야하는 원조기관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져 있다보니까, 굉장히 폐지에 대한 여론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를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김효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은: 저는 경인 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얘기 그대로 해야지 했던 부분을 그대로 뱉으셔서, 저도 사실 한 나라로서의 통일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통일부라는 어감이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부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면, 남북을 통일하는 목적으로 달려가는 데에만 예산과 정책이 쓰여질텐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 입장에서는 통일부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할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만의 평화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 국제사회와의 평화를 쓰여질 수 있는 일들이라면, 말씀하신대로 평화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역할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국제 사회의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다른 나라들에서 온 난민분들까지도 우리가 포섭을 해서 평화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병국 의원: 이 이전 질문중에서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일반적인 국가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국가라고 하면은 통일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지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특수한 타국이다…

정병국 의원: 특수한 관계다라고 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통일부잖아요. 통일을 전제로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 부처라고요. 차관님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첫번째로 뭐라고 나오나요?

천해성 차관: 만든것은 1969년에 당시에 데탕트라던지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있던 기능들을 합쳐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특히 지금 우리 현행 헌법, 1987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규정에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게 대한민국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나 남북 관계 관리, 평화 정착, 평화 실현 이런 쪽으로 가 있는거구요. 말씀드린 김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두가지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효능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채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ㄱ셌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가지가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헌법정신이나, 법률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통일부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대부분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 더 효능감 내지는 존재감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통일부가 제 역할, 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하는 … 물론 이것도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논란들을 채찍으로 생각하고 제 역할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 저는 이런 것을 느껴요.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 행태가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규정짓게 만드는구나.. 많이 느끼게 하는 자리였던 것 같구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일반적인 이웃국가로 봐야한다, 결국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통일을 꼭 해야된다라는 분들이 있지만, 꼭 통일을 해야하는가, 그게 우리의 실리적 관점으로 봐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의 흡수통일 이런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라는게 전반적인 생각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가 처음 설립 취지는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얘기하고 뒤에 통일부의 존속문제가 기존 정치인들이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사람의 사고를 규정짓는지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ㄴ 그런 장면이었구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있어요. 여러가지를 놓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일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아니고 외무부가 할 수 있고, 행정부가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재부가 할 수 있는데, 천해성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이죠. 효율성.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폐문제를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제 여러분들과 준비됐던 6가지 질문들에 관해서 장시간 아주 좋은 의견들을 들었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고싶다라는 것이 있나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윤지민: 저는 통일부에 계셨으니까, 지금 남북의 관계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나빠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천해성 차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은 남북관계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조금 있었구요. 그리고 굉장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서 잘하면 통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많이 나갔던 시기도 있었고, 또 굉장히 짧은 기간동안 남북관계가 후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2000년 6.15때 평양에 갔습니다. 6.13일날 공항에 내려줬을 때, 그 때의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저도 그때는 통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연과학에서도 축적의 시간이라는 얘끼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나 인식, 사고의 발전이든 안정되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루한 행보, 후퇴, 또는 점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런 노력과 그런것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평화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저의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 축적의 시간이다. 물론 동서독의 관계처럼 굉장히 급격한 상황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 보다도, 아까 통일 말씀하실 때도 과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축적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고 또 이런 노력과 젊은 세대들과 같이해서 나간다면,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우리 임주혜 연구원은 전공을 하면서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임주혜: 저는 이런 자리를 사석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남북 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다른 분들의 들어보는 것.. 왜냐하면 청년 세대라고 해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통일부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정병국 의원: 그래요, 저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했던 자리 같아요. 그동안 보면 제가 국회에서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늘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전제하에서 통일부가 존재하고 있고, 국가의 모든 정치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의 남북 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작동을 하게 된 것이 핵인데,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왔지만 답이 쉽게 안나와요. 제가 국회 5선하면서 20년을 했는데 그 중에 반은 통일위원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5년단위로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해도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경제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통일정책은 누가 집권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대하는 국가는 3대째 세습 단일체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전략을 쓸 때나 온건한 전략을 쓸 때나 그 사람들은 핵을 놓고 보고는 항상 기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단계가 점점 강화되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핵보유국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 체제하고 북한 체제의 관계 속에서 보면 통일문제를 비롯한 다른 대북 정책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면 북한도 정권이 바뀌면 다른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틀속에서이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는 전제부터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갖지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북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상대했던 기존 틀 속에서 봤을 때는 통일, 대북 문제만큼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세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통일정책, 대북정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많은 숙제를 받은 듯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